

NLL '부메랑'

민주당 "권영세, 집권하면 대화록 까겠다 말해" ...음성파일 공개 "김무성 의원, 대선 당시 원문 입수...국정원 통해 폭로하려 했다"

대선前 유출·활용說...메가톤급 후폭풍

민주당은 26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 선거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법사위 소속인 박법계 의원의 '폭로'로부터 시작했다. 내용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 대사가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방안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검토했으며, 집권시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권 대사가 지인들과 대화한 것"이라며 녹음파일과 함께 이를 풀어낸 자막을 공개했다. 그는 "이 파일은 도청된 게 아니라 민주당에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취에 따르면 권 대사는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라며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또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권 대사는 이어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나까..."라며 "대화록 작성하는데서, 거기서 들

어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언급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녹음상대가 청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 대사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정치공작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식당에서 (이뤄진) 타인과 대화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녹음했는지도 정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폭로 후 열린 당 중진의원 회의에서 박지연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실세가 직접 개입된 것이 처음 밝혀졌다"고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이 외에도 또 다른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원과 여권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련된 음성과 일을 100여건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선 당시 대화록 원문을 입수하고 국정원을 통해 폭로하려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서 읽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손이 다 떨리더라"며 "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들렸다고 참석자들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정 의원에게 구두로 물어 설명을 받았다"면서 "여기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 문건을 가지고 부산 유세 때 연설에 활용했는데 '문건'이라는 표현이 잘못 알려져 '원문을 봤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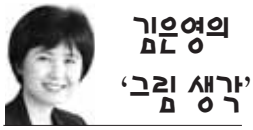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제로 "김 의원이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대화록 입수 경위와 국정원 비선라인 공개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법계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작년 12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임을 언급했다고 주장하며 여의도 한 식당에서 녹음한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전쟁은 이제 그만"



(34) 전쟁

2년 전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1931~2011)는 생전에 자신의 글쓰기가 '증인의 욕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작가는 자전적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한국 전쟁을 겪었던 과정과 신산스런 피난살이, 그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이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파멸시켰는가를 그려냈다.

'휴전 60주년'을 맞이하는 현 상황에서 6·25전쟁은 미술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헤아려 본다. 비평가들은 한국미술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전쟁을 담은 미술작품이 극히 적다는 점을 꼽는다. '세계대전과 유럽미술'의 관계에 대해 보면 '6·25전쟁과 한국미술'의 관계는 사뭇 다르다. 전후 유럽에서 쏟아져 나온 전쟁 미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실감난다.

'반전(反戰) 미술'하면 여성이 자 어머니로서 20세기의 두 대전을 경험한 화가였던 케테 콜비츠(1867~1945)가 석판화로 작업한 작품 '전쟁은 이제 그만'을 떠올리게 된다. 머리털이 뒤로 젖혀

진 짧은 남자가 오른손을 번쩍 들고 반전을 외치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어떤 명분의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결기가 느껴진다. 예술가가 경험한 삶의 고통이 처절할수록 작품은 더 강렬해지는 것일까? 1차 대전에서는 아들이, 2차 대전에서는 또 다시 손자가 전사하는 비운을 겪었던 콜비츠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반전 평화에 대한 바람으로 일관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목관화 연작으로 고발했고, 그 연작 관화는 투신(1881~1936)이 그림으로 대중을 각성시키고자 주도했던 중국 목관화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리얼리즘 계열의 민중미술이 두드러졌던 80년대 초 그녀의 작품들은 한국에도 소개됐는데, 당시 강렬했던 인상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반전의 불꽃을 피웠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불붙은 여야 저격수 'NLL 비방戰'

새누리 "반역 대통령" 민주당 "연산군 같다"

여야는 26일에도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소위 저격수들이 총동원돼 막말 비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산군"이라고 비유하며 맞받았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을 변호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지 못한다"면서 "진실로 밝혀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이유는 적법성 논란에 휩싸인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의 대의명분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해인·사퇴를 요구했으며 새누리당에 대해 왜곡과 중상모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까발리고 비난하는 것은 정상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조선시대의 무오사화로 비유, "국정원이 국기문란 사건을 덮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 될 정상외교 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사조 열람을 사주한 훈구파의 악랄한 수법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사주·복인·방조했다면 연산군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지하철 2호선 착공 청신호

국토부, 설계비 52억원 내년 예산 반영

국회 통과까지 역량 모아야

정부의 신규 SOC(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방침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됐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 설계비 52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내달 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업비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도 고가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기재부의 예산반영에 이어 국회 예산안 통과 등 최종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관심이

요구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심도 방식은 지하 4~9m만 파서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도심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고가방식과 비슷한 저비용으로 기존 지하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창조적 방식"이라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와도 일치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정부의 기본 설계비가 확보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01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구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60%로 1조7394억원이 투입되며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2곳이 건설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샌드위치 신세

2013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영광지소 개소!

'찾아가는 법률보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농어촌,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7월 1일 영광에 공단 지소를 개소합니다. 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런 가까운 지소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이 여러분 곁으로 가겠습니다.

■ 신설 지소 현황

관할	사무소명	주소	전화번호
광주지부	영광지소	전남 영광읍 영광읍 물무로2길 3 KT 영광지사 3층	061-351-8981

•개소일 : 2013년 7월 1일 •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00 ~ 오후 5:00
•도와드리는 일 :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 LEGAL AID CORPORATION